

# 김대중 당선인, 전남광주통합교육청 밑그림 그린다

### ‘K-교육특별시 준비위’ 위원장에 김경범 전 서울대 교수 12명 현장·실무 전문가들로 구성…광주·전남 분할 운영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역할을 수행할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며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김 당선인과 준비위원들은 8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첫 상견례를 갖고 향후 운영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준비위는 9일 오전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을 참배한 뒤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 계획과 비전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교육”을 슬로건으로 내건 준비위는 전남·광주 교육 통합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을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정리하기 위해 12인의 현장 및 실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준비위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통합

교육청의 조직·정책·행정 체계를 설계하는 실무 중심 조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준비위원장은 교육 분야 전문가인 김경범 전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대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대입제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부위원장은 문승태 전 순천대학교 부총장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김용태(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임장옥(전 참교육학부모회 전남지부장) △이환호(전 고려교 교장) △강영(광주송정초 교장) △김두석(광주서부교육지원청 사무관) △안병모(전남교육청 정책연구소장) △한정수(영광초 교장) △김권오(순천선해학교 사무관) △김인(목포여고 사무관) 등이 참여한다. 대변인은



김대중 전남광주통합교육감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격인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가 오는 10일 출범을 앞둔 가운데 김경범 위원장(아래줄 가운데)을 비롯한 12명의 위촉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정수 전 전남일보 취재국장이 맡았다. 준비위는 오는 10일 공식 출범식을 가진 뒤 7월 31일까지 운영된다. 특히 광주와

전남의 균형 있는 통합과 지역 의견 수렴을 위해 광주분부와 전남분부 등 2개 거점 체제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경범 위원장은 “전남과 광주의 안정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동시에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갈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gwangnam.co.kr

## ‘통합특별시 국비 20조 확보’…민형배 인수위 ‘특위’ 가동

### 정부 구체적 지원 지연…“안정적 지원만 만들어 정부 논의”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당선인 인수위가 정부의 20조원 지원 약속을 실행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담 특위를 구성, 대응에 나섰다.

8일 전남광주대통합기획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통합을 추진한 지역에는 매년 5조원, 4년 동안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도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어 인수위 차원에서 ‘20조원 특위’를 꾸려,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특위는 기획재정부 등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백승수 대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맡

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지난 3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5조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은 통합특별시장 선출 이후에도

나오지 않고 있다.

특위는 이 대통령이 약속한 5조원, 4년 20조원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운다는 전략이다. 특위는 “특정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국비지원만 인된다”는 기본원칙 아래 20조원이 안정적으로 전남광주특별시에 투입 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백 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에 20조원 지원은 정부의 분명한 약속이다”며 “현재까지 (지원 방식이) 대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바라는 베스트는 조건없이 20조원이 지원되는 것”이라며 “전남광주특별시의 앞도적 성장을 위해 첨단산업, 반도체 기업 유치 등에 자율적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약속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고민 할 것”이라며 “사업 보조금 또는 교부세로 받는 것이 좋은지 기획위에서 고민하겠지만 기본 원칙은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예산은 기존 광주시 7조6809억원, 전남 11조 6942억원을 합쳐 19조3751억원이다.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조정될 경우 전남광주특별시 재정은 25조에서 최대 30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담양 ‘보촌지구’ 2698세대 주거단지 조성 전남도 실시계획 인가 완료…6월 조성공사 착공

전남개발공사가 담양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담양군 배후 주거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올랐다.

전남개발공사는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지난 5일 전남도 인가를 받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72만 4223㎡ 부지에 2698세대 규모의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전남개발공사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개발을 통해 주거복지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 2017년 12월 담양군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사업 검토에 착수했으며 사업시행자로 참여한 뒤 전남도와 담양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실시계획 인가 등 주요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협의보상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성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보촌지구는 광주 도심 생활권과 약 5km 거리에 위치해 광주 배후 주거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와 담양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우수해 전남·광주 통합 이후 광역생활권 확대 수요도 기대된다.

개발 방향은 친환경 저밀도 주거도시 조성에 맞춰졌다.

전체 사업부지의 35.2%를 공원과 녹지 공간으로 확보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정주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4-REST(자연·소통·행복·여유)’를 핵심 개발 콘셉트로 메타세쿼이아길과 보촌천 순환형 프롬나드, 보촌 테마숲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공간을 조성해 자연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생태친화도시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장승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담양 보촌지구는 광주와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전남·광주 통합시대 광역생활권 형성을 이끌 핵심 사업”이라며 “친환경 저밀도 주거단지이자 현재 협의보상은 대부분 완료됐으며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성공사는 이달 중 착공해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 도, 월동 왕우렁이 집중 관리…벼 피해 막는다 21일까지 우심지역 10개 시군 예찰·사전방제 총력

전남도가 친환경 벼 재배지의 왕우렁이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관리에 나섰다.

전남도는 오는 21일까지를 ‘왕우렁이 피해예방 집중관리 주간’으로 정하고 우심지역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과 예방약제 살포, 농수로 집중 수거 활동 등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왕우렁이는 친환경 벼 재배 과정에서 잡초 제거를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인 농자재다. 하지만 겨울을 난 왕우렁이 성체가 모내기 이후 어린묘를 갹아먹으면서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왕우렁이 활동 흔적을 유지하면서 자연생태계 유출과 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농업인, 생산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중점관리 기간에는 왕우렁이 투입 전 농수로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수거 활동이 진행된다.

특히 용·배수로를 통해 논으로 유입되는 왕우렁이를 차단하는 데 관리 역량을



집중 관리 계획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월동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어 현장 모니터링을 운영하며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시군과 농업기술센터는 예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해 피해 발생 시 신속히 대응

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친환경단지 대표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왕우렁이 관리 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약제 수령과 방제 조치 등 현장에서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해남과 진도 등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월동 왕우렁이 차단대책도 추진했다.

농한기를 활용하는 말리기와 깊이갈이 중점기간을 운영하고 등계작물 재배와 깊이갈이 실천 등을 통해 약 1만6000ha 규모의 월동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고 발생 상황을 공유하는 등 현장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 친환경단지 대표와 이장 등으로 구성된 ‘왕우렁이 관리 현장 메신저’를 운영해 발생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피해 우려가 확인되면 약제 수령과 방제 조치 등 현장에서 즉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해남과 진도 등 우심 시군을 중심으로 월동 왕우렁이 차단대책도 추진했다.

농한기를 활용하는 말리기와 깊이갈이 중점기간을 운영하고 등계작물 재배와 깊이갈이 실천 등을 통해 약 1만6000ha 규모의 월동 방지 대책을 추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1면 ‘전남광주’서 계속

그는 “전남광주를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도시로 만들겠다”며 AI, 반도체, 미래 에너지, 모빌리티, 바이오를 핵심 육성 산업으로 제시했다.

대전기획위원회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전력망 구축, AI·반도체·데이터센터 집적화 등을 핵심 과제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다음달 20일까지 통합특별시 초기 시장 운영 방향과 핵심 공약 실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역시 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인수위와 협력해 주요 행정업무 인수인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이 대통령, 지방 우선 정책 지속…균형발전 속도

▶1면에서 이어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선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조금 기다려보시면 의외의 성과들이 꽤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취임 1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국정 비전을 밝혔다. 특히 “올해를 세계 어떤 나라로 대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대단한 꿈이 시작되는 해로 만들겠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경험과 역량, 가치와 매력, 국가적 위기를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에너지를 다짐을 삼아 ‘K-이니셔티브’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AI를 산업과 일상에 전연화시킨 첫

번째 나라 △자주국방을 계획하는 나라들의 첫 번째 파트너 △비산유국 중에 가장 모범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 △세계에서 전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나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에서 세계가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힘차게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네가지 국정목표로 △조각차 산업 강국 실현 △글로벌 외교·안보 강국 구축 △국민 합의를 규범과 규칙이 확실히 지켜지는 정사사회 조성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와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해, 첨단기술 분야의 압도적 경

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며 “반도체와 다른 산업 부문에서도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 역할을 할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조만간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이뤄낸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며 “국민성장펀드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꼼꼼히 살피고, 반도체로 인한 초과 세수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윤리 “지나간 1년보다 앞으로의 4년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나라의 주인인 위대한 대한민국민들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힘찬 여정에 함께해 줄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 靑, 4부요인과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 마련키로

“선거관리위원회 상시화 문제도 논의…국회에서 의견 모으기로”

이재명 대통령은 8일 4부 요인과 만나 ‘투표지 부족 사태’를 논의하고 선거관리체계를 개혁하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기사 8·19면

이규연 청와대 홍보수통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의 4부 요인 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수시나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게는 행정적·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참정권 침해에 따른 국민의 우려와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번 현정질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부 요인들이 각자 책임 있는 역

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수석은 “(참석자들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수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다만 “입법의 경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칠지는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개헌과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시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했으며 국회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